

# K-SDGs 작업반 목표 및 지표 초안에 대한 지역공동체그룹 입장 문서

그룹대표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 글순서

1. 서문
2. 참여자별 의견
4. 총평

## 1. 서문

### <배경>

- 2015년 유엔 총회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아젠다 선정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환경부를 중심으로 2018년 4월20일 유엔의 17개 목표를 기본틀로 하여 한국형 SDGs개발 및 수립을 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계획 발표.
- 한국형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으로 위한 작업반 구성하였으며, 의견수렴구조로써 2018년 5월 11일 K-SDGs 수립을 위한 이해당사자(K-MGoS) 설명회를 통해 여성, 청소년, 농민, 청년, 노동계, NGOs,과학기술계, 지방정부, 학계, 동물보호, 교육기관, 장애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그룹구성 K-SDGs초안에 대해 입장보고서를 그룹별 작성하여 의견 수렴하고 있음

### <작성과정>

- 5월 11일 K-MGOS 당사자 설명회
- 참여자별 의견서 제출 및 취합

### <구성내용>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중심으로 검토하되, 포괄적인 의견서 작성하게 함

## 2. 참여자 의견

(1) 윤희철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 □ SDG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 1. UN SDGs와의 관계

- UN SDGs와 유사한 체계로 동일하게 관련 지표를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여 연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6.1의 물안전관리기법의 도입은 UN SDGs의 '안전한 식수'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연계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생각됨.
- 또한 6.3의 물 재활용을 우리에게 맞게 물순환과 물 재이용 활성화 등으로 연계한 점도 좋다고 판단함.

#### 2. 빗물 활용, 침투에 대한 내용 추가

- 최근 물순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6.3에 '물순환 개선'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 추가되어야 함.
- 특히 물관리와 관련해 물순환, LID(저영향 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세부목표에 담겨야 함.

#### 3. 광역적 수자원 관리의 필요

- UN SDGs는 6.5에서 초국경적인 통합적 수자원 관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에 대한 부분이 없음.
- 하지만 지역적 차원으로 보면 유역관리는 하나의 지자체로 할 수 없고, 유역과 관련도니 모든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고 보존함.
- 따라서 광역적 물관리 체계의 내용이 K-SDGs 6.5에 포함되어야 함.

#### 4. 물과 생태계 보호의 연계성

- UN SDGs는 '생태계 보호'와 물을 연결하고 있으나, K-SDGs에도 누락되어 있음.
- 최근 몇 년동안 각 지역에서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물순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생물다양성과 물순환이 상호 연계됨을 필연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UN SDGs에서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에서 다루고 있으나, 물과 관련된 부분은 6번 목표에서 다루고 있음을 고려하면, 6번 목표에서도 세부목표로 접근해야 함.
- 강, 하천 등의 생태계를 고려하는 세부목표 및 지표가 추가되어야 함.

## 5. 물환경 거버넌스

- UN SDGs는 6.b에서 물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 있음.
-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함을 말하고 있음.
- K-SDGs에서도 각 지역 차원에서 계속 나타나는 물환경 거버넌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 SDG 7번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 1. UN SDGs와의 관계

- UN SDGs는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개선, 국제협력과 기술투자, 기술발전과 사회기반시설 확대의 순으로 기술됨.
- 반면, K-SDGs는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빈공층의 비율 감소,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증대 등으로 기술됨.
- 국제협력에 관한 부분은 유사하지만, 7.1~3번은 내용 자체가 다르게 구성됨. 우리의 특성에 부합하려는 시도가 보이며, 에너지 빈공층에 대한 세부목표는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 2.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점

- 7.1의 “2020년까지 전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 부분은 한전이 2020년까지 1조 5천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국내 전기사용고객 2000만 호에 구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임.
- 한전의 사업적 성격이 UN SDGs가 말하는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부합한지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듦.
- 시민사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 그룹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함

### 3. 에너지 분권에 대한 내용 추가

- 최근 사회적 이슈로 과거와는 달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에너지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과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4. 재생에너지 비율

- K-SDGs 는 7.3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증대한다고 밝히고 있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통계치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이미 2011년 3%, 2016년 7.24%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발전을 고려하면, 향후 20%는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음.
- 물론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치의 상향도 고려되어야 함

## □ SDG 11번(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 1. UN SDGs와의 관계

- 11번 목표와 관련하여 1차 세부목표와 지표에는 11.1, 11.2, 11.3, 11.7, 11.c와 관련된 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영역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문제와 직결된 부분으로 꼭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이 수준으로는 의견을 내기 어려움.
- 특히 미 작성된 4개 세부목표는 '11.1 적정가격의 주택과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 '11.2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 '11.3 참여·통합·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역량 강화', '11.7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현재 국내 도시문제와 직결된 부분으로 단순히 UN SDGs의 국내이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명확한 이해와 함께 도시분야에 대한 세부의견을 낼 수 있음.
- 11.a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 지원'은 '생태축 설정', '지속가능발전 도농지표 설정' 등 좋은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 제시된 지표는 추가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2. 문화 분야의 추가 및 확대

- 문화 분야의 세부목표는 UN SDGs의 11번 목표 속에 문화 및 자원 유산 보존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 키워드가 오직 11번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서 최대한 문화를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는 실천운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야 내용적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 함.
- SDGs 자체에 문화에 대한 고려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지속가능발전에는 환경,

경제, 사회 영역 속에 문화와의 관계가 깊숙히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노력에 집중할 때, 실제 SDGs를 시민 스스로 이행하는 실천동력이 생활문화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K-SDGs에 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함.

- 따라서 K-SDGs가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SDGs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목표 속에 생활문화, 문화향유의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는 별도 목표 또는 영역까지 확대되지 때문에 11번 목표 내에서 추가적인 조정 또는 세부목표의 조정도 고려해야 함.
- 또는 별도의 목표로써 18번 목표로 문화 분야를 확대 및 재편할 필요도 있음

### 3.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의 실효성 문제

- 추진방향은 '계획을 통한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작성 초안에 동의함.
- 하지만 일부영역, '도시·군기본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통합관리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현행 법 제도적으로 상호 협력에 대한 명확한 검토 또는 협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과거에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지만, 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제대로 계획관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전례가 있음.
- 또한 지표로 제시되어, 이 계획의 수립이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4.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한 국제연대 및 협력 강화

- '11.c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은 도시개발과 ODA의 연계를 고려하여 일본이 최근 추진하는 'Spatial Planning Platform'과 같이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해외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의 ODA와 같은 분야를 해당 지표에 포함할 수 있음.

## □ 기타의견

UN SDGs가 2015년 발표된 후 우리나라는 공식번역본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 및 먹거리 :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로마 영양에 관한 선언 및 행동계획(the Rome Declaration on Nutrition)'

생산/소비 : '지속가능 소비/생산 패턴 10년 프로그램(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기후변화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제21차 UNFCCC 파리협약문'(2015.12)

생태환경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2011-2020 생물다양성 아이치 목표'(2010.10)

도시 : 유엔 해비타트, '2016-2036 신 도시의제'(2016.10)

복원력 : '2015-2030 재난위기감소 센다이체계(DRR)'

재원 : 국제개발금융회의(FfD),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2015.7)

UN SDGs는 모든 내용을 세부목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에 이뤄진 각종 협정 또는 협약,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려면 각 분야별 협정의 공식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 협정들에 대한 비공식 번역문도 없는 상황입니다.

(2) 김국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 SDG 11.2

<p>2. 세부목표별 현안진단과 방향제시</p> <p>1) 현안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평일 대중교통 이용자는 2015년 현재 하루 평균 1277만 명이며 전체 통행의 약 74%는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8.18)</li><li>○ 수도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2001년 47.3%에서 2014년 48.4%로 약 1.1%상승한 반면, 지방대도시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2001년 38.9%에서 2014년 28%로 약 10.9% 가량 하락 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차이를 나타남</li><li>○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나 수도권(54.3%), 부산광역시(51.7%)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음</li><li>○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등 에너지 효율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저조함</li><li>○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의 80%이상이 육상(도로)교통에서 소비되는 비효율적인 교통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구조가 지속됨</li></ul>
--

**검토의견**

세부목표별 현안진단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수송분담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표는 교통수단 분담율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 되어 있습니다.

- 수송과 수단의 차이점이 분명히 다르다.
- 환경을 생각하여 시민들께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 택시, 지하철, 자전거, 도보)를 이용하는 것은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이 수송은 사람을 포함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기에 수송과 수단의 구분이 필요하다.
- 현안 분석과 목표에 이행에 대한 평가 수단인 지표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임병호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 SDG 1. 빈곤퇴치

##### ■ 작업반 세부목표(1.3)

-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 작업반 지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의견

세부목표의 사회안전망 포함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 이행 관련, 사회적안전망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지표를 삽입할 것을 제안 (사회복지사, 돌봄노동 종사자 등)

#### SDG 2. 기아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 ■ 작업반 세부목표(2.4)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 작업반 지표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 ■ 의견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비, 유통, 소비자 인식 변화 등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기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 유무 등을 지표로 추가 제안함.

## SDG 3. 건강 및 웰빙

### ■ 작업반 세부목표(3.D)

-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케어 관련 정책목표와 지표(임종관리, 호스피스 등)
- 보건부분 이행수단 목표 개발

### ■ 작업반 지표

- 없음

### ■ 의견

국가에서도 치매는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차원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인구 고령화 관련 목표가 제시되었기에 ‘치매 환자 현황 및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

## SDG 4. 양질의 교육

### ■ 작업반 세부목표(4.4)

-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적합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취업과 창업 등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가진 청소년, 성인 등(구직자 및 재직자 포함) 비중을 높인다.

### ■ 작업반 지표

-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 ICT 산업·직종 종사자 수

### ■ 의견

단순 직업교육참여자 수 외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 제안  
(실제 취업 연계율, 이수자 만족도, 직업교육 커리큘럼 적정성 등)

## SDG 5. 성평등

### ■ 작업반 세부목표(5.3)

-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의 근절

### ■ 작업반 지표

-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 ■ 의견

현 목표와 지표는 UN SDGs지표로 국내 사정에 대입했을 시 유의미한 지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른 대안지표 마련 필요.

### ■ 작업반 세부목표(5.5)

-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 ■ 작업반 지표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
-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 ■ 의견

주요 공직 및 기업체 관리자의 남녀비율은 최근 성평등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도출되고 있는 지표임.(성 평등한 상태라 규정할 수 있는 %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실제 관리직에 있는 여성이 여성을 대표하거나 담보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작업반 세부목표(5.B)**

-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 **작업반 지표**

- 휴대폰 보유율 - 성별 및 연령
- 여학생 이공계 진학률
- 이공계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의견**

목표와 지표간 연계가 명확치 않음.  
이공계 진학률 및 이공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성 권한 강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성별 휴대폰 보유율을 통해 여성 권한을 체크하는 것은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표는 아니라고 보여짐.

**SDG 8. 경제성장**

■ **작업반 세부목표(8.5)**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

■ **작업반 지표**

- 비농업부문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비율
-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

■ **의견**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는 말 그대로 일자리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인데,  
현 지표는 일자리의 질적 평가는 불가능한 지표.

## SDG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 작업반 세부목표(8.5)

-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하고 식품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 ■ 작업반 지표

- 식품 손실 지표(Food Loss Index)
- 식품 폐기물 지표(Food Waste Index)

### ■ 의견

소비자 수준에서 식품폐기물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학습이 필요함.  
이에 먹거리 교육 지표를 추가 제안

## (4) 이해경 / 인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 K-SDGs 수립시 공동체 의견

#### 1. 공동체적 관계망의 복원

도시와 농촌, 어느 지역사회라도 생활단위에서 일상적인 대면관계를 복원하고 소통과 협동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공동체적 생활관계망의 단초를 키워나가는 장으로 삼는다.

#### 2. 상호부조와 협동의 경제

지역사회와 마을을 중심으로 상호부조와 협동으로 경제주체를 만들어나가는 장으로 삼는다.

#### 3.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

마을을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자치력을 강화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장으로 삼는다.

#### 4. 더 이상 쫓겨 나지 않는 주거환경

개발로 마을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벗어나 살고 있는 곳을 고쳐가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5) 양준화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K\_SDGs 세부목표 검토의견 -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 관점에서

### G. 1

1.4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 문구 수정 동등한 권리와 우선적권리의 모순..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 G. 2

2.3 ○ 효율적인 농업자원 활용을 통한 실질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세무목표 추가 - 소규모 식품생산자 한국적 개념 삽입

- 고령농, 가족 소농의 영농비율을 유지하고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 효율적인 농업자원 활용을 통한 실질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2.4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세무목표 추가 - 과투입 토양수탈 방지의 지속가능농업 개념 명기필요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친환경 농업, 자위순환 농업을 확대한다.

2.5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유전

- 가축 지방품종의 비중

#### 지표 추가 - 식량개념보다 확산된 생물다양성 개념 추가필요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유전
- 가축 지방품종의 비중
- 관리되는 멸종위기(보존가치가 있는 지역품종) 유전자원의 수

2. c ○ 적정량의 재료 사용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 연계성 높은 목표로 이동 -> 12.3으로 이동

### G.3

3-1 ○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한 출산의 비율

#### 지표 삭제 - 한국상황에 실효성 있는 지표인지 검토 필요

3-3 ○ 결핵발생률(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 B형간염 양성률
- 지표 추가- 기후변화요인 반영
- 결핵발생률(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 B형간염 양성률
- 열대성질환 발병율

3-4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되는 인구의 비율, 재난적인 의료비 자부담으로부터 보호받는 가구의 비율

연관성 높은 목표의 지표로 이동 3.8로 이동

3-8 건강보험 관련 지표 추가 필요.

G. 4

4-7 ○ 세계시민교육의 증진 및 확산 / ○ 세계시민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세부목표와 지표 수정 - 세계시민교육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용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증진 및 확산 / ○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G. 6

6.1 ○ WSP수립율(%)

지표 수정 또는 추가 -WSP개념 쉽게 표현 필요 , 상수도보급률 대체제로 적정한지..

-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물안전관리 계획 수립율
- 상수도 수질기준 및 보급률

6.b

목표와 지표 추가 - 물거버넌스 유역거버넌스플 통한 물 관리 필요

물과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 거버넌스 비율

G. 7

7.3 세부목표와 지표 추가 - 에너지 효율화 목표 중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2배로 증대 ○ 에너지 원단위 개선목표 제시(?)

7-a, b 유엔목표와 연계성을 위해 a, b 재배치, 화석에너지인 청정석탄화력기술 삭제 검토

7-a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에서 국제협력연구 확대

-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부문 연구 국제협력 예산의 전체 에너지부문 국제협력 비중
-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기술 부문의 국제협력연구에서 개도국의 비중

7-b ○ 한국이 수행하는 국제개발지원(ODA)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개선기술의 지출 비중 확대

- 우리나라의 ODA 지출 중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전력송배전 사업 지출 금액과 비중

G. 9

9.4 ○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 / ○ 고도화 기술의 순수출 규모

-8.2로 이동

G. 11

11.7 ○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지표 수정 - 오픈스페이스 개념 포함한 유엔목표에 맞춘 광장 포함

-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광장 및 공원녹지면적

G. 12

12.8 ○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 ○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율

목표 및 지표 수정 - 환경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명칭변경

- 지속가능성 인식 및 정보 확산을 위한 교육 예산 확대 / 세계시민의식 교육,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그리고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12.c ○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목표 및 지표 추가 - 화석연료보조금의 한국특징인 전기요금제도 개편 필요성

-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와 전기요금 현실화
- /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전기요금 원가율

G. 13

13.3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비율/ 탄소포인트 지급액

지표 수정 - 국가 배출량(총량 지표) 필요, 탄소포인트 삭제

- 국가 및 국민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G. 17

- 17-14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수립한 총괄기구 수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 일관성 가이드라인수
- 지표추가 및 이동 - 총괄기구에 지방정부 추가, 개도국원조분야는 17-16으로 이동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수립한 총괄기구를 둔 지방정부의 수

17-16 **지표이동**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 일관성 가이드라인 수

- 17-17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할당된 금액(KOICA, EDCF, KSP 등 민관협력(PPP) 자원측정)
  - 공인된 민관협력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 수

지표 수정 - 지방정부 삽입, 명확한 단어사용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투입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자원
- 공인된 민관협력 추진기구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 수

## 4. 총평

·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 환경 등 모든 영역에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한 목표에 국한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나 11번, 16번, 17번 목표와 세부지표 관련하여 기술함.

- 11번 목표에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안전 분야 평가지표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상황임
- 11번 목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지원 정도
- 17번 목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활동 활성화 정도
- 16번 목표 갈등관리 역량등 평화로운 지역공동체등